

투데이 칼럼

분단비용과 통일비용

통일비용 부담 때문에 통일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사실 통일비용은 통일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한다. 문제는 통일비용보다 분단비용이 더 크다는 사실이다.

분단비용이란 남북한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군사비와 체제 유지비 그리고 안보비용 등을 모두 포함하는 비용이다. 남북한은 모두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분단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분단비용은 유·무형의 비용으로 구분된다.

유형의 분단비용으로는 무엇보다 국방비다. 군사비 지출이 엄청나다. 남북한을 합치면 현재 180만 명이 넘는 정규군을 유지하고 있다. 정규군 규모는 인구가 20배 이상 많은 중국 다음으로 세계 2위에 속한다. 미국, 인도, 러시아보다 많은 숫자다.

우리나라는 한 해 막대한 돈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정부 예산의 10%에 해당되는 엄청난 비용이며 모두 국민의 세금에서 나오고 있다. 북한 역시 전체 국가 예산의 1/3 이상을 국방비에 쏟아 붓고 있어 경제난이 더 심각해진다.

남북한이 보유한 군사 장비는 물론 정규 병력과 예비 병력, 군사 훈련 등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다. 통일이 되면 모두 줄일 수 있는 비용이다. 군 병력을 산업인력으로 활



정복규 통일 교육원

용치 못해서 생기는 비용도 분단비용이다.

남북한 간에 육로가 없다. 한반도는 대륙으로 이어지는 육로가 차단돼 있어 불류비가 막대하다. 열차편은 없고 배편과 항공편만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섬 아닌 섬나라다. 불류방 연결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통일이 되어 유라시아 철길이 열리면 한반도는 대륙과 대륙은 물론 대륙과 대륙을 연결할 수 있다. 무형의 분단비용은 남과 북이 서로에게 갖고 있는 증오심, 전쟁 위협, 이념적 갈등이 해당된다. 물론 이를 수치로 계량화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부정적 영향은 막대하다. 전쟁 위협은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의 국가신용등급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외국 자본 유치도 어렵다. 모두 경제에 직접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로 숨겨진 장병들의 목숨도 대표적인 무형의 분단비용이다.

사람의 생명은 돈으로 매길 수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분단비용이 통일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들어간다는 점이다. 반면 통일비용은 시간이 지나면 소멸하는 한시적 비용이다. 남북한 통일은 막대한 통일비용 이전에 훨씬 더 많은 통일이익을 가져다준다.

통일의 가장 큰 이익은 먼저 북한을 새로운 경쟁업 기지로 만드는 일이다. 한국은 수출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1965년부터 1972년까지 매년 약 27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졌다. 중화학공업 건설이 본격화된 1973~1979년 사이엔 매년 44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창출됐다.

북한의 경쟁업과 중화학공업이 본격화되면 북한에서도 연간 최소 20만~40만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

통일비용은 기본적으로 분단비용을 줄여서 마련해야 한다. 남북한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한

반도에 긴장이 완화되면 막대한 분단비용을 얼마든지 줄여나갈 수 있다.

남북한이 국경비단 줄여도 통일비용을 마련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북한 경제가 발전하면 통일비용도 줄어든다. 독일 통일에 막대한 통일비용이 들어간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독일 통일을 하면서 서독이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었던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서독이 동독을 흡수 통합하면서 모든 비용을 부담했기 때문이다. 통일로 향해가는 과정은 분단비용을 줄이고 통일비용을 함께 마련하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 경제 교류를 활성화하고 북한이 경제 발전을 통해 스스로 통일 비용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어느 정도 수준에 올려놓을 것이 필요하다. 통일비용은 지나질 정도로 과장돼 있다. 통일비용의 원래 의미는 북한 주민의 생활수준이 남한 수준이 될 때까지 들어가는 돈이다. 통일비용은 고무를 같은 것이다.

형편이 안 되면 목표를 70%로 낮출 수 있고 50%로 낮출 수도 있다. 북한 주민이 고향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줄 정도로 더욱 낮출 수도 있는 것이다. 통일비용이 크더라도 분단비용은 더욱 큰 것이다. 분단비용은 소모성 지출이고 통일비용은 일시적으로 들어간다.

사설

대학입시 문과 이과 구분 폐지

올해부터 대학입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 지난 2015년 개정 교육 취지에 따라 문·이과 구분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국어와 독서와 문학이 공통과목,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수학은 공통과목인 수1, 수2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가운데 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문과계열은 지금과 비슷하고, 이과계열은 공부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탐구영역도 계열 구분이 사라진다.

사회와 과학영역을 통합해 17개 탐구 과목 가운데 자신이 원하는 두 과목을 선택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학들이 화과별로 특정 과목 이수를 고집할 경우 취지를 살리기 어려울 수 있다.

제2외국어와 한문은 영어와 한국사처럼 절대평가로 치러진다. 70%를 유지해왔던 수능 EBS 연계율은 50%로 축소된다. 서울 16개 주요 대학은 내년에 정시비율을 37%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문과·이과 구분 시스템은 1963

년 제2차 교육과정 때 도입되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다. 일제는 단기간에 기능 인력을 키우려는 취지에서 문과·이과를 구분했다.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문과·이과를 구분하는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일본, 중국, 대만 등 과거 일제의 영향 아래 있던 국가들 뿐이다. 1995년 시행된 제3차 교육과정부터 문과·이과 구분은 공식적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고등학교는 고교 2학년 때부터 문과와 이과로 반을 나눠 가르치고 있다. 대학들이 인문·사회계 학과는 사회탐구 과목을, 자연계열은 과학탐구 과목의 수능 점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어린 학생들에게 평생 좌우할 선택을 강요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모든 학생에게 인문학적 소양과 함께 과학적 인성을 길러주는 전인(全人)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공계 출신을 선호하는 탓에 인문계 출신은 취업도 힘들다.

전주 신도심 전셋값 초강세

전주 신도심을 중심으로 전세값이 계속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시세가 늦게 반영되고 개

가격을 올려받으려는 집주인이 늘어난 것도 이유다. 문제는 전셋값이 오르면 집값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전셋값이 계속 올라가면 차라리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한다. 결국 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어렵게 잡아 놓은 집값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전주 신도심의 전용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는 이달 초 4억5천만 원에 전세계약이 이뤄지면서 최고가를 기록했다.

전주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뒤 보름 만에 5천만 원이 올랐다. 비슷한 면적의 다른 아파트들도 마찬가지다. 3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 가량 급등한 곳도 있다.

아파트값 상승이 주춤하자 조정지역으로 묶이기 전의 시세가 뒤늦게 반영되고 있다. 개정된 임대차법도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7월부터 계약 갱신 청구권이 시행되자 2년 더 버려왔던 세입자가 늘면서 전세 매물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전주의 경우 60%나 줄었을 정도로 전월세 상한제 도입으로 미리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심리가 작용한다. 결국 또 집값이 올라갈 것이다. 치솟는 전세값이 집값을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전주는 지난해 말 부동산 거래를 규제하는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전주와 경기 과주, 충남 천안 등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전국 36곳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전주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청약과 대출 등 여러 규제를 받는다. 청약의 경우 1순위 자격요건이 청약통장 가입 후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강화됐다.

분양권 전매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점까지 금지된다. 주택담보대출 담보인정 비율이 9억 원 이하의 경우 50%가 적용되는 등 주택담보와 전세 대출 조건도 까다롭게 바뀐다. 그런데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년 전보다 8.85% 상승했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기고문

신축년 설 명절에는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자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은 온 가족이 모여 만찬을 즐기며 덕담을 나누는 날이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하여 "만남보다 마음으로 함께하자"와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는 등 올해 설 명절 모임을 자제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올해 설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만남보다는 마음을 전하는 명절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특별히 값진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자 한다면, 올해에는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해보자.

요즘과 같이 대기가 건조하고 추운 겨울철에는 난방시설, 개인의 부주의 등으로 화재가 많이 발생한다. 부모님

이 계시는 고향집도 미리 대비하고 있지 않으면, 화재가 발생했을 때의 피해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의 절반 이상이 주택화재에서 발생한다. 특히 우리 부모님, 조부모님과 같은 고령층에서 인명피해가 크다. 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것이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주택용 화재경보기이다.

'소화기 1대는 소방차 1대'와 같다고 한다. 사실 소화기 비치로 화재를 초기진압에 성공한다면, 주택용 소화기의 가치는 소방차 몇 대와도 비교할 수 없다.

그리고 주택용 화재경보기는 집을 비웠을 때나 잠든 사이에도 화재를 감지해주기 때문에 초기진압에 결정적



진 화수 남원소방서 4명 119 안전센터장

인 역할을 하는 시설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2017년 2월 5일부터 기존 주택을 포함한 모든 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방, 거실 등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하고 주택용 화재경보기 방,

거실 등 구획된 실 마다 설치하고, 벽면이나 기구로부터 60cm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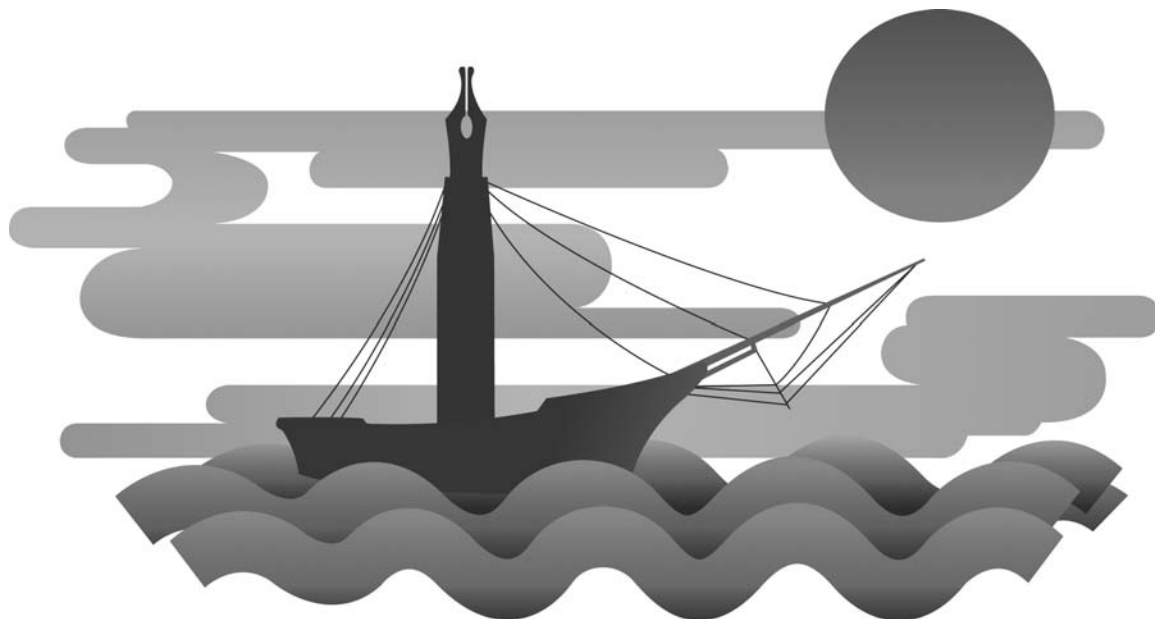
만약 설치가 어렵다면 남원소방서에 문의하면 된다.

남원소방서는 소방대원들의 예방활동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캠페인, 의용소방대원의 대민안전 활동 등을 통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적극 돕고 있다.

올해는 꼭 부모님의 안전을 챙기는 선물로 마음을 전하고 소중한 우리 가족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자.

또 고향집에 올바른 난방용품 사용법을 알리고 부주의나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하도록 하자.

'월 소'의 해인 신축년이 열렸다. 우리 모두 이중섭 화백의 '월 소'처럼 역경 속에서도 우직하고 굳건하게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